

# 여 “민노총 방송 장악법” vs 야 “尹정권 방송 장악 방지법”

### 방송법 충돌... 與 ‘안전조정위’ 카드로 野 단독처리 저지 무소속 박완주 ‘캐스팅보트’... 민주, 정기국회내 처리 목표

여야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일단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안전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여야는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맞붙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법 개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래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날치기 방송법 규탄’, ‘민노총 방송장악법 폐기’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

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10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논란은 계속됐다”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장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저지했지만,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전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의 협의 하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즉각 회의를 진행해 달라”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꾸린 조정위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순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안전조정위는 바로 법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전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과방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연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중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연합뉴스

## “화물연대 강경몰이”... “국가경제 위한 것”

### 한노위 ‘집단 운송 거부’ 놓고 야당-이정식 고용부장관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익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 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

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 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가부 폐지’ 신경전... ‘3+3협의체’ 첫날부터 삐걱

### 여야 ‘공운법’ 알박기 인사 논란 견해차만 확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은 여가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도 임기 일치 당위성에 야당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일단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부터 자진 사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에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국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송연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알다시피 장관급 자리에 국정철학이 다른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거취를 정리하면 (임기 일치 논의도) 더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정부 말기에)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모인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용빈, 장애인 차별 방지 ‘무장애 5법’ 대표발의

### “모든 예산정책, 장애 고려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1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무장애인재예산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되는 예산이 아닌,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 및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안을 적용시키고,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 정책들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혜격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여부·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분리통계가 없어 격차 해소가 어려웠다”며 “‘무장애5법’이 도입되면 장애분리통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예산을 평가·집행할 수 있어 예산정책 개선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신안동, 상업용지	대인동, 상업용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덕남동,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요양병원 옆</li> <li>· 대지 176평</li> <li>· 일반상업지역</li> <li>·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li> <li>·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li> <li>· 매매 - 23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백화점 부근</li> <li>· 대지 156평</li> <li>· 일반상업지역</li> <li>·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li> <li>·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li> <li>· 매매 - 20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층 중 17층</li> <li>· 계 14평, 전 9평</li> <li>· 무등산 방향</li> <li>· 일조권 전망최상</li> <li>· 사무실 전용</li> <li>· 매매 - 6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대병원 부근</li> <li>· 지분매매, 200평</li> <li>· 도시지역, 자연녹지</li> <li>· 그린벨트, 도로접</li> <li>·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li> <li>· 매매 - 6천만원</li> </ul>
<p><b>상담 및 문의. 010 - 9582 - 7400</b></p>			